

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

1. 한국경제의 성장추이

개항 이전 한국경제는 비교적 생산력이 높은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자본주의가 이식(移植)되면서부터 시작된 불균등발전은 한국 경제의 지역별 자급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더구나 1910년 일본이 강점하면서 한국은 하나의 자기완료적인 경제가 아니라 일본경제에 대하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속경제로서 파행적 발전이 강요되었다. 산미증식(産米增殖), 남면북양(南棉北羊), 남농북공(南農北工), 대륙병참기지(大陸兵站基地) 등으로 표방된 식민지정책은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경제를 고도의 보완성을 갖는 남과 북 두 부분으로 이질화시켰다. 해방 직전 한국경제에서 남쪽이 차지하던 비중은 인구 64.0%, 경지 54.1%, 농업생산 65.0%, 전력생산 3.6%, 철광자원 23.5%, 석탄 자원 24.5%(단, 광주기준), 경공업 74.1%, 중화학공업 21.3%였다.

남북분단은 보완성을 가진 두 개 지역경제를 단절함으로써 남북한 경제모두를 불구로 만들어 상당 정도 자족적이었던 하나의 국민경제를 두 개의 완전한 의존경제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해방 후 남북한 국민의 최대 과제는 양적으로는 물론 국민총생산과 1인당 소득수준을 높여 경제적 선진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만 못지 않게 질적으로는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부문을 보완하여 하나의 자기완료적 국민경제 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1993년 현재 남한경제는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하였고 북한경제는 그 어느 한가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크게 3단계적 변화를 겪어왔으니 1945~61년

간의 복구건설시대, 1962~80년의 고도성장시대, 1981~92년까지의 안정추구시대가 곧 그것이다.

1.1. 시장체제 하의 경제 발전 (1945~61)

1.1.1. 시장경제를 위한 체제 정비

1937년 한국에도 중요산업통제법이 실시되면서 1910년 이래 본격적으로 자리잡아 가던 시장경제가 통제경제로 바뀌어 해방될 당시에는 자유시장은 거의 전부 자취를 감추었다. 해방이 되면서도 군정당국에 의한 통제는 부분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통제경제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웠다.

첫째, 일제의 민족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이 고위공직 특히 물동계획이나 물자통제를 주관하는 요직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국민경제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관료조직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둘째, 태평양전쟁이 진행되면서 소비재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고 전쟁노력극대화를 위하여 갖가지 형태의 공출(供出)을 통한 민부(民富)수탈이 극에 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사이에는 통제경제가 곧 공출제도이고 배급제도이며 동시에 가렴주구(苛斂誅求)제도라는 인식이 뿌리박혔다. 또 경제적 통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커서 비록 경제관료가 통제경제를 운용할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분위기로서는 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급부족이 극심하고 시장조직도 완전히 회복 안 된 상태였고 민간 수송수단도 불비했던 까닭에 배급제 존속이 불가피했던 정부수립 초기에 농림장관이 공출제도 폐지를 농민에게 약속하였다가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건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해방 후 만 3년 간 한국경제를 관리하였던 미군정 당국과 정부수립

후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철학은 자유 기업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선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해방 후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는데 통제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첫째 직접통제의 축소, 둘째 귀속재산 몰하, 셋째 농지개혁이라는 획기적 변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정부규제 축소를 살펴보면 정부수립 직후 미국 경제협조처와 협의하여 실시한 「한국경제의 강화 및 안전을 위한 8개 원칙」이 ① 정부재정 균형유지, ② 통화발행 통제, ③ 외국무역의 국내영업 보장, ④ 수출산업 발전 촉진, ⑤ 환율책정, ⑥ 정부기업 재산의 효율적 운영, ⑦대외무역의 국가 통제, ⑧ 국산양곡 수집배급제도 존속으로 ⑦과 ⑧ 이외에는 모두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정부가 당연히 할 책무를 원칙론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 후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수정된 종합경제시책인 「경제안정15원칙」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가 통제정책 수립만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자유당 정부는 UNKRA재정지원 하에 초년도 15%, 최종연도 5%, 5개년 평균목표 성장률 8.8%를 내용으로 하는 네이던(Nathan) 계획을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이 기간 중 가장 엄격한 규제대상이었던 환율만 보더라도 이를 직접 통제하지 않고 미국측이 환율 인상을 요구할 만큼 국내물가 및 실세환율이 상승하면 정부 보유 달러를 대량 매각하여,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주요원인인 시중유동성을 환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공급을 늘려줌으로써 실세환율을 떨어뜨리는 간접통제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1940년말 현재 공칭자본금을 기준한 민족 별 공장소유비율을 보면 94.1%가 일본인 소유였다. 1941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을 일본인에 의한 공장건설과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기 폭격을 피한 공장소개(疏

開)가 있었다.

따라서 해방된 시점에서의 민족 별 공업자산 소유비율에서는 일본인소유 비율이 훨씬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일본인소유 공업생산 시설은 그 밖의 생산적 또는 소비용 시설과 함께 귀속재산으로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몰수되었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다시 우리 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국유화된 생산시설을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아마도 당시로서는 가장 국유화 비율이 높은 기업국가(企業國家)가 되었을 것이다.

자유기업 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제란 민간기업이 기업자유를 완전히 갖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에 관한 배타적 결정권을 갖는 자유기업이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전담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완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당 정부가 대한석탄공사(大韓石炭公社) 등 4대공사만 남기고 거의 모든 귀속사업체를 몰수한 것은 이러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가 뿌리내리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민족차별 정책에 의해 생산수단소유에서 해방되고 식민지 수탈에 의하여 부를 상실한 국민들에게 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물질적 선행조건인 소유를 창조해 줌으로써 재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끝으로 농지개혁 역시 농민에게 재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업부문에서의 귀속재산 몰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농업부문에서의 중간착취를 배제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여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산업구조 기반을 마련케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한국전쟁이 일으킨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보상증권이 휴지화하여 효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토지증권

에 의한 공업부문 출자를 허용했던 조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해방과 분단에 따른 혼란과 충격, 한국 전쟁으로 인한 파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적 특징을 하나 하나 갖추어갈 수 있었다.